

# 변경 1000원권 대응,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자판기가 먹고 사는 것은? 돈이다. 돈이 아니면 자판기는 그 존재가치를 보장받지 못하는 물론 작동자체가 되지 않는다. 투입금액에 상응하는 물품을 무인서비스 하기 위해선 돈을 투입되는 기본행위가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 이 기본행위는 소비자와 자판기와의 1차적인 약속이자 신뢰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되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이다.

그런데 이러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연결고리가 최근 외부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위협받고 있다. 한국은행 및 조폐공사의 변경 1000원권 발행계획으로 자판기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산업계에 닥쳐올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폐를 인식하지 못하는 자판기는 엄청난 직무유기이다. 지폐가 안되면 동전을 넣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 시각도 있겠지만 동전이 있으면 지폐는 애초 꺼내지도 않는 게 일반적이다.

가뜩이나 시장부진에 시달리는 산업계에 전혀 예기치 않았던 시장악재. 이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자판기 산업은 큰 위기상황에 빠질 가능성도 크다.

그간 협회도 이 사안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산업계를 결속해 줄기차고 강력한 대응을 진행해 왔다. 그탓에 아직 본격적인 발권이 이루어지지 않고 발권시기도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시기를 최대한 수용, 점차적인 발급을 진행해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확답을 받아 놓은 상태이지만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교체비용문제, a/s문제, 필드대응, 매출감소, 기계파손 등 현시점에서 우려되는 상황은 너무도 많다. 따라서 이 부분에 산업계가 어떻게 적극적인 대응을 진행해 나가느냐에 따라 그 피해와 파장의 범위가 달라질 것으로 보여진다.

현시점에서는 최소한의 피해가 외당도록 필드에서의 원활한 대처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본란에서는 현재 변경 1000원권에 대한 산업계의 대처 현황을 알아 보고 산업계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현명한 대처를 진행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 자판기가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는 돈이 좋은 돈인가

현재의 변경 1000원권 문제는 세계에서조차 유래를 찾기 힘든 특수한 경우이다. 보통 자판기 인식장치의 혼란은 화폐단위가 바뀌거나 규격과 디자인이 바뀐 신권이 발행될 때 발생하는 게 보통이다. 여기에 한가지의 경우가 더 있다면 위조화폐를 자판기에 불

법 유통시키거나 화폐단위 차이가 나는 제3국 동전을 유통시키는 경우이다.

화폐단위가 바뀌거나 규격과 디자인이 바뀐 신권이 발행될 때는 국가 고유의 화폐정책의 변화의 범주이기 때문에 해당 산업계가 바뀌는 화폐에 맞추어 인식시스템을 변경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 과정이 쉽지가 않고 막대한 교체비용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순순히 산업계가 수용하기란 쉽지 않다. 이런 경우 발권기관과 산업계는 한차례 홍역을 거친 후 현실적인 대책안이 도출되는게 보통이다.

최근들어 이러한 발권정책 변화에 따른 자판기 인식체계의 혼란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본의 2000엔권 발행, 미국의 5달러, 10달러 신권 발행 등 막대한 교체비용과 시간을 소모해야하는 산업계 악재가 범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 귀결은 산업계가 발권정책 변화를 수용하는 쪽으로 결말 날 수밖에 없다. 신권이 유통되는 마당에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라도 자판기 사용에 지장이 없게 만들어야지 이에 넘놓고 있다가는 오히려 더욱더 큰 혼란과 피해가 닥친다. 따라서 발권기관과 산업계는 서로 간의 밀접한 협의체계를 구축, 국민생활에도 피해가 안가고 산업계 피해도 극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발권이전 충분한 사전대비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변경 1000권의 문제는 신권과는 성질이 판이한 경우이다. 변경 1000원권은 지폐의 규격과 디자인이 바뀐 것이 아니어서 육안으로 보기에 구권과 똑같이 구별자체가 불가능하다. 지폐를 사용하는 국민 입장에서 볼때는 그저 과거와 똑같은 돈으로 인식될 뿐이다. 하지만 문제는 자판기가 이 지폐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내막을 모르는 소비자에게는 그저 과거에는 잘들어갔던 돈이 갑자기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자판기에 돌릴 수밖에 없다. 아무런 잘못 없는 산업계로서는 정말 답답하고 억울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아무 이상이 없어야 할 지폐가 왜 안들어 가는가? 문제는 발권기관에서 이같은 현상의 발생 가능성을 철저히 간과했다는 점이다. 즉 발권기관에서는 발권이후 변경 1000원권이 자판기 및 현금취급기에서 문제를 일으키리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막힌 상황이 어떻게 발생한 것인가? 조폐공사는 자동판매기 및 현금취급기 미인식문제는 새로운 고성능 고속 인쇄 시설을 도입 가동하면서 은행권 색상감저하 방지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새로운 안료를 추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 해명하고 있다.

스위스 테라지오리사로부터 355억원을 들여 도입한 것으로 알려진 새천원권 인쇄라인은 구인쇄기에 비해 인쇄 속도가 엄청 빠른 고성능 제품으로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도입한 설비이다.

하지만 엄청난 국가 예산을 들여 도입한 신설비로 찍어낸 1000원권이 자동판매기 인식에 있어 결정적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발권전단계까지 전혀 파악이 되지 않았었다. 작년 8월 발권이후에야 필드에서 이러한 인식불량의 문제들이 발생하자 그제서야 문제의 심각성을 안 발권기관에서는 발권을 중단하고 부랴부랴 대책마련에 나서기에 이른 것이다.

고가의 설비 도입함에 있어 자동서비스의 인식문제는 당연히 고려가 되었어야 한다.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무인서비스기기에 제대로 인식이 되지 않는 돈을 생산성 향상과 색상감 방지 등의 이유로 발행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명분이 크지 않다. 이런 경우엔

오히려 국민에게 더 편리해야 할 변경권이 더 불편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구권보다 유통가치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막힌 사후약방문의 결과 앞에서 산업계는 당혹하지 않을 수 없다. 설비는 이미 바꾸어 놓은 마당이고 이를 되돌리기는 불가능한 현실에서 문제가 터졌으니 말이다.

설비가 교체되기 이전 자동판매기 대한 인식문제가 산업계와 사전협의를 했어도 이 같은 어처구니 없는 결과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현재의 사태를 초래한 발권기관의 무책임한 발권행정은 분명 지탄 받아야 하는 위중한 사안이다. 수백원을 들인 고가의 기조 화폐라인은 8개월 째 놓고 있고 이미 찍어놓은 돈들은 창고에서 유통되지 못하고 쌓여 있으며 피해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자동판매기 산업계는 기술개발, 필드적용, 비용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느냐 고심에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 숨가쁘게 진행된 변경권 대응 현황

### ◎ 변경권 대응 일지

- 조폐공사, 99년 8월부터 업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변경권 발행 (발행규모 70억 추정)
- 자동판매기 및 현금자동입출금기 입수율 불량 사태 발생
- 변경권 인식불량과 산업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정책 비판하는 매스컴보도, 문제 확산 (SBS 11월 27일 8시뉴스, 동아일보 11월 27일자)
- 한은 및 조폐공사 부랴부랴 대책 마련 착수
- 협회, 산업계 대책회의 개최, 대처방안 협의/ 사태의 심각성 인식하고 건의안 제출 등 공동대응하기로 결정(12월 2일)
- 각 업체별 변경권 입수율 테스트 착수
- 한은 및 조폐공사 위변조 방지요소에 대한 설명회 개최/ 산업계 강력 반발(12월 9일)
- 조폐공사내 상설시험장 단기간 운영 (12월 13일~31일)/ 업체별 입수율 결과를 토대로 단기대책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서약서 받음.
- 협회, 한국은행을 대상으로 산업계 반대 입장을 밝히는 건의안 제출(1월 19일)
- 협회, 조폐공사를 대상으로 변경지폐 테스트 결과 및 문의사항 통보(1월 19일)
- KBS 9시 뉴스, 자동판매기의 인식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한은 및 조폐공사의 변경권 발행계획을 전면 비판하는 내용의 뉴스를 취재 방영(1월 17일)
- 한국은행, 산업계 건의안에 대한 회신을 통해 발행기간은 늦추되, 발행은 강행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 표명
- 협회, 조폐공사 방문 화폐사업부와 업무협의/ 산업계 기술협의진 구성, 조폐공사와 기술협의 진행키로 약속
- 제조분야·음료·운영분야 등 총 12개 업체 참석, 변경권 발행방지를 위한 업계 긴급 대책회의 (2월 22일)
  - 강도높은 대응을 진행해 가기로 결정
  - 입수율 향상 방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폐공사 기술팀과 기술협의를 진행하기로 결정

- 기술협의팀 구성, 조폐공사 화폐사업부 방문, 본격적인 기술협의 진행 (2월28일)
  - 변경권의 품질 불균일의 원인, 변경권 입수율 향상 방법, 각 Lot별 샘플 제공 요청, 추후 개별업체별 기술협의 계획 조율
- 변경권 발행저지를 위한 업계 대책회의(4월18일)
  - 성명서 발표 등 향후 전체적인 대응방향에 대한 세부계획 및 일정을 확정
  - 기술협의를 진행해 오면서 야기되었던 시료제공 비협조, 품질관리기준 비공개 등의 문제점과 향후 변경권 발행시 사후관리비용 부담에 대한 발행기관의 입장, 추후 신권발행시 사전협의체 구성 등에 대해 한국은행에 공식 질의를 진행키로 결정
- 변경권 질의사항에 대한 발행기관 공식입장 표명 전체회의(5월 3일)
  - 비용분담 책임없다는 입장 표명
  - 개별업체 기술협의거친후 시료제공키로 약속
  - 차후 신권발권시 사전협의체 구성, 산업계와 협의키로 약속
- 협회 이사진 긴급회의 (5월 9일)
  - 사후관리 비용 분담 책임 추궁키로
  - 객관적 비용산출을 근거로 산업계 에로사항을 공식문서로 한국은행 질의키로
  - 공동대응은 질의 내용에 대한 확실한 회신을 받은 후 진행키로 (명분과 근거 마련 위해)
- 질의서 제출을 위한 실무회의 (5월 10일)
  - 질의 항목 및 세부적 내용 협의
- 질의서 작성 및 업체별 검토 (5월 10~15일)
  - 세부적 내용 보완/ 수정
- 한국은행 기획조정국 질의서 접수(5월 17일)
- KBS 변경권 취재협조를 위한 업체 대동, 대전 KBS 방문 (5월 29일)
  - 산업계 입장 공식 표명
- 한국은행 질의 회신 접수 (6월 1일)
  - 실무자 회의시 답변 내용과 큰 변화없어
  - 비용문제 발권당국 책임사항아니라는 공식입장 표명
  - 향후 「신권발행시 기술대응을 위한 사전협의체 구성」에 대해 공감, 앞으로 구체적인 구성방안에 대해 협회와 긴밀히 협의·논의키로
  - 기술 협의후 시료제공 약속
- KBS 9시 뉴스 보도 (6월 6일)
  - 새천원 인쇄라인 멈춰서게 된 상황, 집중보도
  - 발행재개 입장 되풀이하고 산업계 기술개발이 이루어졌다는 조폐공사의 주장 전면 반박
  - 시장 파장 및 비용부담에 대한 협회의 입장 보도
- 개별업체별 기술협의 진행
  - 한국콘락스(6월 9일), 삼성전자 (6월 10일), 캐리어·LG (6월 13일)
  - 기술 협의진행후 시료 제공키로 약속
- 협회, 변경권 시료 테스트 일정 및 알고리즘 개발 계획 통보(6월 26일)

○ 업체별 은행권·인식 알고리즘 개발일정

- 추가 시료 검사결과가 이상없어 별도의 프로그램 조정이 필요 없겠다 판단시, 각 업체들이 신뢰성 테스트를 거쳐 기술개발을 완료, 본격 양산에 적용할 수 있는 시점은 8월 21일~9월 1일 경으로 파악되었다고 통보.

○ 필드적용 계획

- 아직 비용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에 대한 발권기관 및 산업계, 운영자와의 절충안이 도출되지 않았고, 개인 소유가 대부분인 자판기를 운영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상태에서 B/S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 오랜 시간 소요 및 인력문제 등의 요인으로 필드 적용을 할 수 있는 시기를 제시하기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통보.

- 단, 대형 OP의 경우는 비용문제에 대해 합의를 보고 사전에 B/S요청을 하게 되면 일정기간 내에 대처가 가능하리라 본다

● 개별업체별, 변경권 시료 테스트 진행

- 삼성전자(6월 28일) 한국콘락스(6월 29일), 캐리어·LG (7월 5일)
- 3사 공히 테스트 결과 이상없음 (입수율 양호)
- 기술적 문제는 완전 해결
- 조폐공사와 기술협의 더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 변경권 대책회의를 통해 향후 발권이후의 산업계 대책 협의(7월 7일)

8개월 째 접어든 산업계의 변경권 대응은 정말 어렵고도 힘든 과정을 거쳐 왔다. 발권을 반대하는 산업계의 입장과 발권을 강행할 수밖에 없는 발권기관 입장은 팽팽한 대립 속에서 타협점을 찾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산업계는 협회를 중심으로 강력한 결속 체계를 구축, 발권기관과 수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하며 발권반대에 대한 산업계의 입장을 주장했으나 국가 화폐정책의 고유성과 발권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발권기관의 입장도 강경했다.

발권기관은 이미 새로운 신설비로 설비교체가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발권을 강행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적어도 발권문제를 놓고보면 서로간의 타협점은 있을 수 없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서 기술개발과 필드적용에 대한 문제 역시도 쉽사리 협의점을 도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이런 이유로 서로간의 대립과 반목으로 소모전 양상으로 치달던 변경권 문제는 점차 현실적으로 급한 사안에 포커스를 맞춰 가기 시작했고 발권기관과 산업계의 양자간의 문제가 아닌 국민 입장까지도 포함해야하는 전체적인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발권기관은 발권을 하더라도 산업계의 대비가 이루어져 국민 생활의 불편을 극소화하고 산업계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점을 발권시기로 삼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산업계는 기술개발 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협조요청과 향후 교체비용에 대해 발권기관도 책임을 공감하고 공동분담을 하는 방안을 제시하기 이르렀다.

이에 대해 발권기관은 발권시기, 기술개발 협조 문제엔 최대한 협조할 수 있어도 비용문제는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는 책임회피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무튼 산업계는 그간의 대응을 통해서 발권의 시기를 최대한 보류하는 성과를 얻었고 그동안 기술개발의 최대 애로점으로 작용했던 추가시료제공 협조를 도출해 냈으므로

서 프로그램 대응을 완전 해결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향후 은행권 및 미인식 은행권 발행에 대비하기 위해 사전협의체를 구성해 현재와 같은 문제가 차후에는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산업계의 요청에 대해 한국은행은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협회와 구체적인 협의체 구성 방안에 대해 협의 논의해 나가기로 공식 약속을 했다.

한편 변경권 문제는 양자간의 문제만이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서도 마스크의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었다. 특히 KBS의 두차례 9시뉴스 보도를 통해 자동판매기 인식문제를 고려치 않은 무책임한 발권행정이 전면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가 닥칠 자판 산업계의 입장이 보도되어 적지 않은 여론의 힘을 등에 업었던 게 사실이다.

## 산업계의 향후 대처 방안

지금까지의 산업계의 대응은 강력한 가운데서도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책을 모색했던 방향이었다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은 보다 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원활한 필드대응을 진행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쪽으로 포커스가 맞추어질 것이다.

그렇다고 이같은 대응방향이 변경권의 발행을 산업계가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다. 지속적으로 발권기관의 책임을 물어 비용문제에 있어서는 운영자와 제조분야뿐만이 아닌 발권기관에서도 분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갈 예정이다.

이같은 대응은 별도로 하되 현재 산업계가 발권이후의 상황에 대해 뉘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시점이다. 더욱이 그동안의 애로점으로 작용하던 기술개발 문제가 해결된 상황에서 필드대응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와 있다. 만약 이러한 대응에 소홀히 한 채 발권이 본격 이루어 진다면 자동판매기 분야의 혼란은 견잡을 수 없게 된다. 순수한 소비자 입장을 고려한다면 지폐식별기에 대한 원활하고 신속한 대처로 자동판매기 이용불편을 최소화해야 하는 것이 산업계의 책임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산업계도 프로그램 개발을 종료하고 제품 양산적용시점을 잡아 점차적인 필드대응을 진행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현재 신제품에 대한 프로그램 적용이 가능한 시점은 8월말 경으로 예상하고 있다. 필드제품에 대한 대응은 운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진행되게 된다. 따라서 본격적인 필드적용은 변경권이 발권되어 유통이 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될것이다.

필드적용에 소요되는 교체비용은 발권기관에도 그 책임을 지속적으로 묻기로 하되 우선 산업계에서 유상 서비스 금액을 정해 필드 적용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교체비용은 우선 메이커와 소비자가 일정분담을 하는 것을 기본 모토로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 유상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 대국민 공고 및 발권기관의 협조 지원 문제

변경권 발행후 닥칠 문제에 대해 발권기관이나 산업계가 소비자 및 운영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으니 만큼 신문매체를 통한 대국민 공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산업계의 입장이다.

이를 위해선 두가지 방향이 있다. 첫번째는 발권기관과의 협조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이고 두번째는 산업계 자체적인 공고를 진행하는 방안이다.

첫 번째 방안의 경우 한국은행은 신권과는 달리 이번 변경권은 공고의무가 없기 때문에 신문매체에 공고를 진행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대신 발권시점에 각 매체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산업계와 협조 지원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보도자료의 내용은 상호간에 충분한 조율을 거쳐 작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계 자체공고 안은 기존 성명서 게재 계획과 연계, 발권기관의 무책임한 발권행정을 지탄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며, 산업계의 유상서비스 계획이 포함되게 된다.

한국은행이 보도자료를 배포를 통한 협조 지원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도 별도의 산업계 자체공고를 진행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더 관련업계의 의견을 들어보고 게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발권시점, 최대한 산업계 의견 반영

한국은행은 협회와의 대책협의를 통해 발권시점은 최대한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산업계의 필드대책이 어느정도 이루어진 상황에서 발권의 시기를 결정할 것인지 독단적으로 발권을 강행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에서 생각하는 발권의 시점은 적어도 대형 OP업체들이 필드대응을 진행한 시점이다. 개인 운영자들의 경우는 발권이전에 B/S를 진행한다는게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대형OP만이라도 사전 필드대응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게 한국은행의 시각이다. 따라서 협회가 관련업체들의 신속한 OP대응을 유도하며 발권시기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물론 이는 OP업체들의 대응이 빠른 기간내에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만약 사전 필드대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국은행 역시도 마냥 기다리고 있지 만은 않을 것이다.

한국은행은 향후 발권이 진행되더라도 산업계의 필드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 서서히 물량을 늘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현재의 1000원권 신권과 변경권의 발권비율을 처음에는 9:1의 비율에서 점차 8:2, 7:3으로 늘려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렇듯 한국은행은 발권시기와 통화량 조절에 있어 산업계에 최대한 협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한국은행에 있어서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변경권 발행이후의 피해와 파장일 것이다. 따라서 산업계의 대책이 마련되어 가는 상황에서 무리하지 않게 변경권의 발권을 진행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대형OP 역시 변경권이 유통되기전 사전 필드대응은 쉽지가 않다는 점이다. 비용이 들어가는 사전B/S를 문제발생 이전에 요청하는 OP업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무책임한 발권행정이 발생시킨 현재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되돌릴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대응은 원활한 프로그램 교체와 발권기관에 대한 비용분담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방향으로 포커스가 맞추어질 것이다.

앞으로 발동에 떨어질 불을 잘끄기 위해서는 산업계가 일치 단결, 비용문제에 있어서나 필드교체에 있어 일사불란한 협조체계를 마련할 수있어야 한다. 최소화해 책정된 유상 수리비에 대해 운영자들이 반발을 한다든가 필드교체를 방임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진다.

변경권 문제를 업계가 단합해서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